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배 정 호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명박 대통령 방일의 주요 배경

2002년의 ‘월드컵 공동개최’, ‘2002년 한·일 국민교류의 해’, ‘겨울연가’ 등 한국 TV 드라마에 의한 한류열풍 등의 영향으로 한·일 양국 국민간 차원의 우호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으로 고조되어 갔다.

그러나 2005년에 접어들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었고, 참여정부의 대일정책은 ‘조용한 외교’에서 ‘공세적 외교’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한·일관계는 갈등의 증폭과 함께 불편한 관계로 악화되었고, 고이즈미 총리의 퇴임시까지 양국 정상간의 신경전은 지속되었다.

2006년 9월 고이즈미 총리가 퇴진하고, 이어 등장한 아베 정부와 후쿠다 정부는 동아시아외교의 전개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개선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우호적 분위기의 조성 이외에는 그다지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즉,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추구되었지만, 중단된 ‘서틀외교’는 재개되지 않았고, 중단된 경제연대협정(EPA) 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재개되지 않았으며, 북한 문제를 둘러싼 공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본 정계를 비롯한 후쿠다 정권은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시하고 실용주의 외교노선에 따라 실질적인 이익의 증진을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대해 매우 높은 기대를 표명하였다.

후쿠다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모리 요시로 전 총리 등 100여명의 일본 정·재계 주요 인사가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으며, 취임 직후에는 첫 정상회담인 한·일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일본정부는 4월 1일 발표한 「2008년판 외교청서」에 2·25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는 ‘한·일 신시대’를 열었다고 명기하였다.

요컨대,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하고 한·일간의 신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으로서 3년 4개월 만에 일본을 방문하였다.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성과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재일동포 리셉션, 일본 경단련 주최 오찬, 일왕 면담, TBS 주최 ‘일본 국민과의 대화’ 등의 일정을 가졌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는 과거사 보다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신시대’ 개척에

합의하였고,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하였으며,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와 인적교류의 저변확대에 역점을 둘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의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성과와 관련해서는 서틀외교의 복원과 정상회담의 활성화,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확인과 상대방 대북정책의 지지·표명, 균형있는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서틀외교는 한·일 두 정상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당일 또는 1박 2일의 짧은 일정으로 편안하게 양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로 2005년 6월 이후에 중단된 서틀외교의 복원은 한·일 정상이 현안들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하며, 한·일 양국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서틀외교가 복원됨에 따라 정상회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는 북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확인하고, 6자 회담틀 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긴밀한 한·일 공조를 확인하였고, 아울러 상대방 대북정책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즉,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납치문제가 6자회담의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북·일 평양선언'을 토대로 한 북·일 국교정상화의 추진을 지지하였으며, 후쿠다 총리는 '비핵·개방·3000'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한·일 무역수지에서 한국의 적자가 2007년에 298억 8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므로, 한·일 정상은 양국 경제관계의 균형있는 발전 추구에 합의함과 더불어 중단된 한·일 FTA 협상의 재개를 지향한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FTA 협상 이전에 기업간 협력문제, 특히 취약한 부분에서의 상호협력"을 강조하였고, 한국의 무역적자 가운데 부품소재 분야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본기업의 대한국 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 '일본의 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의 설치를 검토·추진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민영방송인 TBS의 특별프로그램 '일본 국민 100인과의 대화'에 출연하여 바람직한 한·일관계, 양국 관계의 미래를 짚어질 한·일 젊은 세대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르다"며 "후손에게 정직히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과거를 다시 만들어 낼 수 없지만, 미래는 양국이 힘을 합치면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그 결과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한·일 간의 성숙된 동반자 관계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었으며, 4·21 정상회담을 '서틀외교'의 제1탄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예컨대, 「니혼케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한·일 양국정상이 지난 2월에 이어 '미래지향의 성숙된 파트너십'이라는 새로운 관계 구축에 나섰다"고 평가하였고, 「요미우리」(讀賣)신문과 「교토통신」 등은 양국 정상끼리의 신뢰조성을 통해 '한·일 신시대' 구축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대북 융화정책을 전환하여 대북 지원의 조건으로 비핵화의 진전을 명확히 함에 따라 후쿠다 총리도 납치·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는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보도하였다. 「니혼케이자이」 신문 및 「요미우리」 신문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긴밀한 한·미·일 3각 연대의 강화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21세기의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의 성숙된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고 더불어 긴밀한 한·미·일 3각 연대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일간의 폭넓은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즉, 극소수 선동정치가의 자극적인 언행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된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한·일 양국은 성숙된 역사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공동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한·일 전문가 그룹, 시민단체 등 민간 수준의 교류를 한층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